

『정보통신산업동향』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로, 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 산업동향」

## 목 차

[정책동향]	-----	1
◇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동향 및 시사점		
[이슈분석]	-----	12
◇ 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반대주장의 주요내용 및 반박논거		
[경기변동동향]	-----	22
◇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	22
[연구원동향]	-----	25



##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동향 및 시사점

산업정책실 도윤희 연구원  
yunhee@kici.re.kr

### I. 개요

최근 ICT인프라 분야는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등 각 분야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은 '14년을 기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했으며 '16년에는 '14년 대비 4.1% 하락한 수준이다. ICT 분야의 활성화 및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정체 및 치열한 경쟁 구도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 강화와 시장 확대 전략이 절실해 보인다.

세계 건설시장의 경우 시장규모는 건설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연평균 3.9% 증가율로 2030년에는 17.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또한 '17년 전 세계 IT 시장은 3.5조 달러로 연평균 2%대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통신 분야의 경우 1.4조 달러의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sup>1)</sup>.

반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1.1%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실적 대비 비중 또한 1.8%에 불과한 실정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 전망과는 달리 정보통신공사업은 국내시장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진출 실적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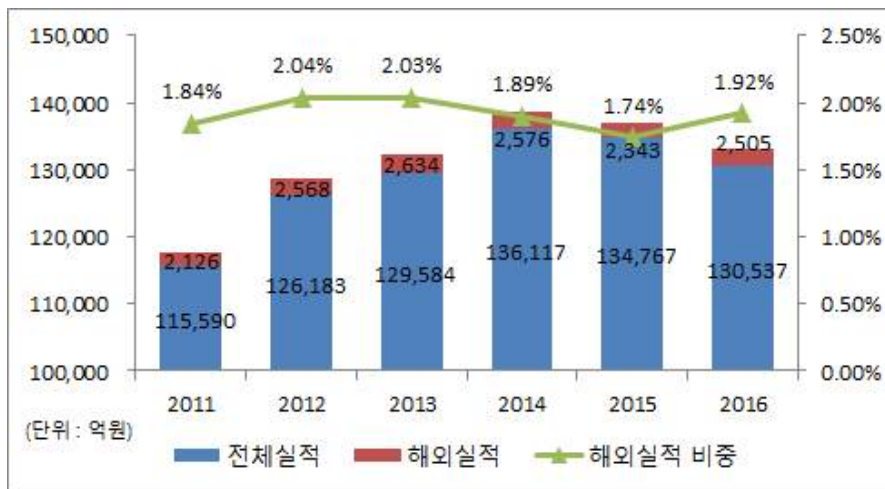
1) Gartner(2017.7)

## II. 수주실적 추이

### 1. 연도별 수주실적

정보통신공사사업체의 '16년 전체 수주실적은 13조 53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해외 진출에 따른 실적은 2,505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6년간 해외진출 실적은 연평균 -1.3%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실적 대비 1.91%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정보통신공사사업 수주실적 추이

'15년 기준 산업별 해외 수주실적 비율을 비교해보면 정보통신공사사업의 경우 1.7%로 유관산업 대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은 32.7%, 전기공사업 6.7%, 건설엔지니어링업 5.2%, 전문건설업 3.2%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사업 대비 최소 2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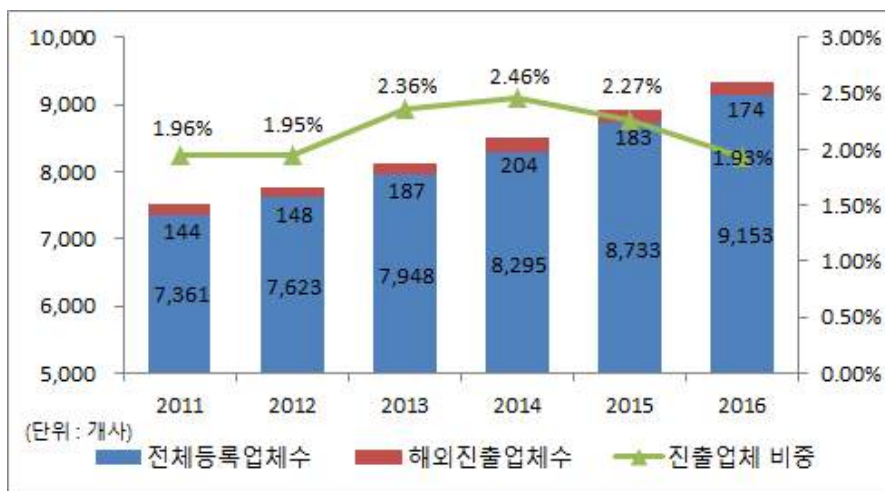
[표 3] 산업별 해외 수주실적 비율

(단위: 억원)

구분	해외수주실적	국내수주실적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2,343	134,767	1.7%
종합건설업	516,688 <sup>2)</sup>	1,579,836	32.7%
전문건설업	27,844	876,236	3.2%
전기공사업	14,593	216,653	6.7%
건설엔지니어링업	1,573	30,385	5.2%

※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진출 업체 또한 '16년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등록업체수 대비 1.93%(174개사)의 업체가 해외진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14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6년에는 '14년 대비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수 추이

2) 2017.8월 기준 환율로 적용하여 산출함

산업별 해외진출 신고 업체 현황 또한 전체 업체수 대비 3.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유관 산업 중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 16.9%, 전기공사업 7.5%, 전문건설업 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산업별 해외건설업 신고 업체수

(단위: 개사)

구 분	해외건설업 신고 업체수 <sup>3)</sup>	공사업 등록업체수 <sup>4)</sup>	신고업체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291	9,155	3.2%
종합건설업	1,962	11,579	16.9%
전문건설업	2,245	38,652	5.8%
전기공사업	1,136	15,078	7.5%
건설엔지니어링업	575	3,361	17.1%

※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2. 지역별 수주실적

최근 3년간 지역별 진출건수의 평균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은 절반이 넘는 68.9%(67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뒤를 이어 중동지역이 9.6%(94건), 아메리카 7.6%(74건), 유럽 5.8%(57건), 아프리카 5.4%(53건), 기타 2.7%(27건)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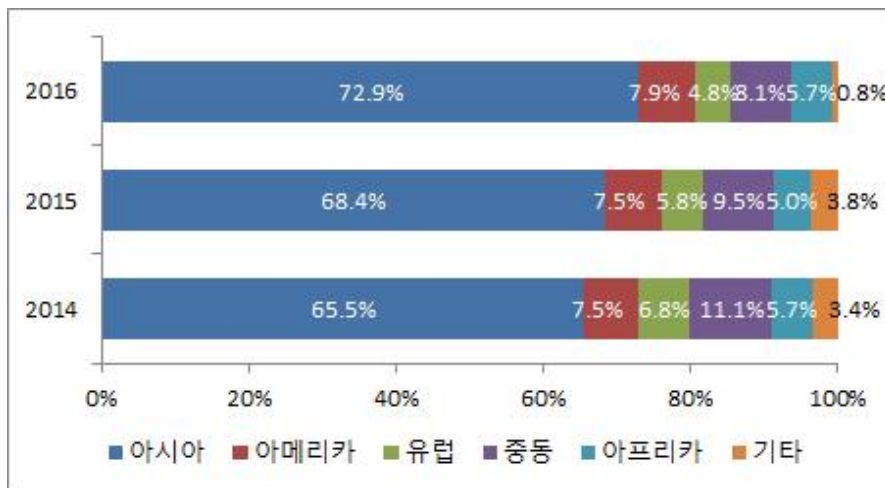
3) 2017.8월 기준 누계

4)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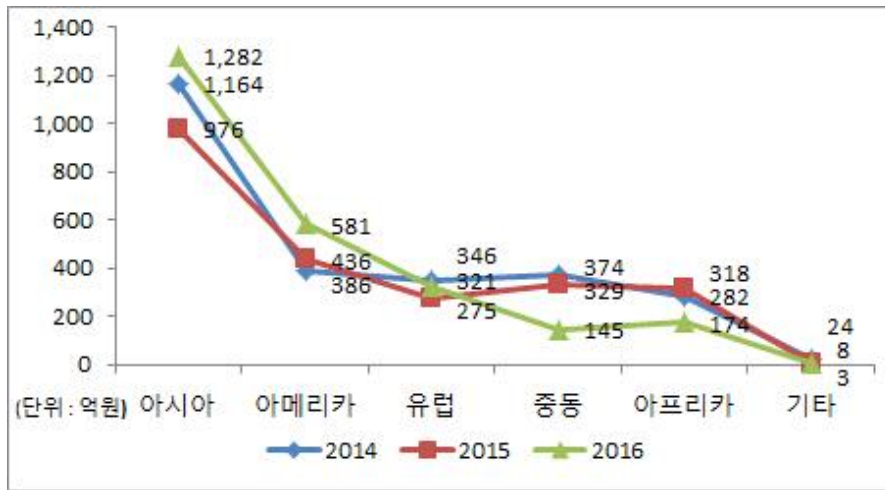
지역별 수주규모 또한 아시아 지역이 연평균 1,140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메리카 467억원, 유럽 314억원, 중동 282억원, 아프리카 258억원, 기타 11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건설시장의 경우에도 아시아 지역은 세계 건설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시장으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타 지역 대비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반면 수주액의 46%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상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수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수주규모 증감률을 살펴보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경우 평균 23.1%,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은 최근 3년간 평균 34.1% 감소하였으며, '16년에는 전년 대비 5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사정 악화와 이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 및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3]



[그림 3] 지역별 진출건수 비중 추이



[그림 4] 지역별 수주실적 추이

### 3. 공종별 수주실적

공종별 진출건수의 최근 3년간 평균비중을 살펴보면 선박통신설비 45.3%(445건), 정보보안설비 21.5%(209건), 구내통신설비 11.7%(114건), 기타설비 11.6%(114건), 망설비 6.6%(65건), 방송설비 1.9%(19건), 이동통신설비 1.2%(11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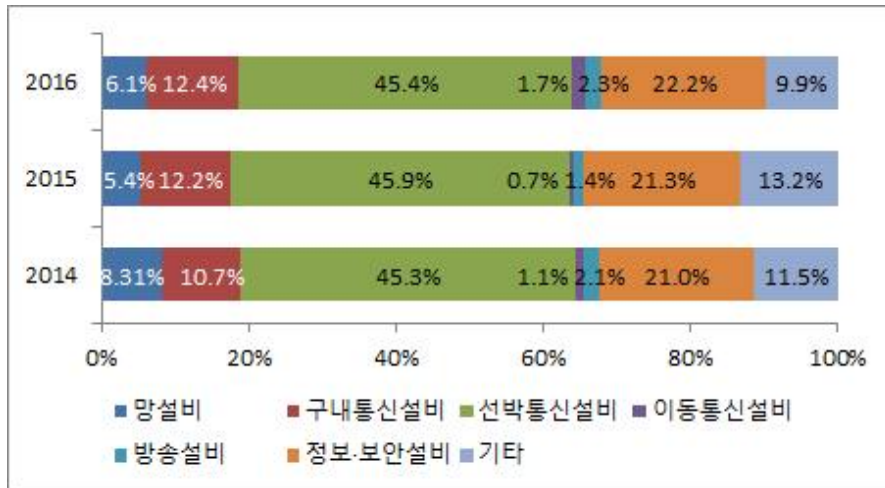
공종별 수주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693억원으로 정보보안설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망설비 308억원, 구내통신설비 199억원, 선박통신설비 162억원, 방송통신설비 41억원, 이동통신설비 30억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정보보안설비의 경우 진출실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18.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이 현실과 밀접하게 접목됨에 따라 주요 제어 시스템의 중요성 부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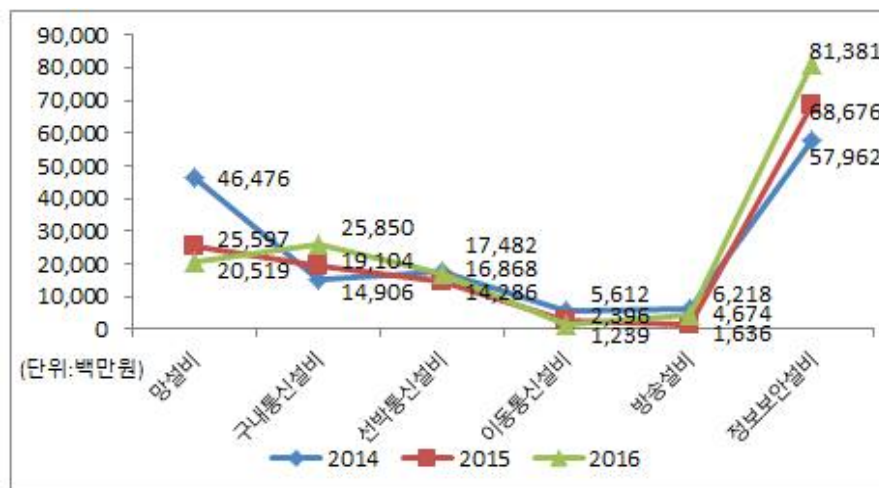
‘16년 기준 정보보안설비 내 주요 세부공종으로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설비(416억), 경비보안 설비(109억),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 설비(75억), 관제설비(72억) 등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비의 경우 전체 공종별 실적에서도



2순위<sup>5)</sup>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대비 56.2% 증가하였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함으로써 수주 지역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73.4%(305억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공종별 진출건수 비중 추이



[그림 6] 공종별 수주실적 추이

5) '16년 기준 매출규모 1순위는 광통신케이블설비(443억)

#### 4. 업체별 수주실적

해외 진출업체 중 매출액 상위 30개 업체의 수주실적은 평균 1,986억원으로 전체 실적 대비 8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에는 '14년 실적 대비 2.5% 증가한 반면 30위 이하 업체의 경우에는 22.1% 감소한 실적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낮은 해외진출 문제와 함께 일부 상위 업체를 통한 해외진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현재까지 시공경험 및 자본조달 역량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이 더욱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매출액 기준 수주실적 추이

(단위: 천원, 건)

구 분	2014		2015		2016	
	매출액	진출건수	매출액	진출건수	매출액	진출건수
상위 30개 업체	202,777,592	240	185,252,517	274	207,832,670	210
상위 30개 업체 제외	54,899,449	819	49,089,277	733	42,760,315	656
합계	257,677,041	1,059	234,341,794	1,007	250,592,985	866

### Ⅲ. 시사점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경쟁구도가 포화상태로 변화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시장 활용을 통한 공사물량 확대는 공사업체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수주액은 전체 실적 대비 1.85%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관산업 대비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선택이 아닌 필수시장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 및 공종별 실적을 살펴본 바로는 기존 아시아 위주에서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야 하며, 통신 및 정보보안 분야의 수주 확대를 통해 수익성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매출액 상위 30개 업체들의 진출 비중이 평균 80.2%를 차지하고 있어 해외진출 시 시공경험 및 역량, 자본조달 등의 요소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주확대를 위해 컨소시엄 및 M&A를 통한 대형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업체들의 높은 기술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 부재, 현지화 애로, 선진국 업체와의 경쟁, 지원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공사업체 해외진출 추진이 부진한 이유로 파악할 수 있다.[4] 이를 반영하듯 국내 해외진출 실적을 보유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판로 및 시장 개척(11.1%), 자금지원(11.1%), 진출국 정보지원(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개척에 따른 비용 지원, 다양한 정보제공 등 실효성을 보유한 지원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 추진되고는 있지만 유사 산업 위주의 지원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운용 현황

기 관 명	사 업 명	지원대상 및 한도	지 원 내 용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 해외 정보화 컨설팅 및 해 외 ICT/SW 사업 수행 경 험 및 역량 있는 국내 IC T/SW 기업 등	- 해외 정부, 사업 발주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및 사업 수주 전 략 수립 - 최대 9천만원 이내
한국데이터 진흥원	K-Global 데이터 글로벌 사업	-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 중견기업 - 데이터 기술, 컨설팅 서비 스, 유통 등의 사업을 추진 하는 중소중견기업	- 데이터 솔루션의 수출을 위한 설계, 개발, 테스트, 현지검증, 마케팅활동 등 지원 - 최대 7천만원/ 1,500만원 이내
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 한 업체 - 해외시장 진출개척을 계획 또는 진행하고 있는 기업	- 해외 공사업 프로젝트 수 주를 위한 활동 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이 추 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수 주활동 초기 단계 지원 - 최대 2억원 이내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	-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 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 공사 -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등	- 신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개별사업 2억원 이내, 타 당성 조사는 3억원 이내



## VI. 참고 문헌

- [1] “Global Construction 2030: A global forecas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2030”,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 and Oxford Economics, 2015
- [2] 이윤관 외,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2015
- [3] 정창구,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 해외건설협회, 2015
- [4] 정창구, 김효은, “건설경제”, 해외건설협회, 2016
- [5] 김효실 외,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진출 역량강화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16

## 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반대주장의 주요내용 및 반박논거

원가관리실 홍태선 선임연구원

hts@kici.re.kr

### I. 분리발주제도와 통합발주제도

건설공사 발주체계는 크게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방식으로 구분되며, 통합발주는 발주자가 전체 공사를 하나의 원도급업체(종합건설업체)에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계약이 발주자-원도급업체,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간에 성립하는 수직적·계층적인 생산체계이다.

반면 분리발주는 발주자가 개별 전문공사(정보통신, 전기, 소방 등)에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보유한 다수의 원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에게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계약이 발주자와 다수의 원도급업체간에 성립하는 수평적 생산체계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은 2017년 기준 9,300여개 업체가 등록하고 13조 4천억원(2015년 기준)의 실적을 달성하며 전문직별 공사업으로서 건설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며,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현재 이러한 발주제도 방식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의 상반된 주장과 첨예한 의견충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본 고에서는 종합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주요 반대논리와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 II. 분리발주제도 주요 논리 및 반박논거

분리발주 반대 주장(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찬성(전문직별·전문건설업계)
<p><b>1. 종합과 전문간 수직적 생산체계 위배·역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발주 법제화는 현행 관련 법령 및 규정 등과 충돌되어 혼란이 발생</li> <li>- 분리발주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분리발주 확대 시, 대형·중견 전문건설업체 수주 독식 가능)</li> <li>- 현재 건설공사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며, 통합발주는 고수익 구조가 아님</li> </ul>	<p>⇒ <b>수직적·계층적 생산체제로 인해 각종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발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발전 및 수직적 생산구조로 인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li> <li>- 전 정부의 대선공약, 인수위원회에서도 상기 목적으로 분리발주 법제화를 추진</li> <li>-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전문직별 공사업계(정보통신, 전기, 소방 등)와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분리발주 확대적용 또는 법제화를 요구</li> </ul> <p>※ 일본은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해 「관광수법」 등을 통해 정부 지자체 조달물량의 55.1%를 할당(중소기업자 수요 증진 도모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p>
<p><b>2. 하자책임 구분 불분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추가 시공이나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의 책임 소재를 동등한 원도급사 관계에서는 조정이 어려움</li> <li>- 선후 공정간 하자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사업 전반을 총괄 책임지는 자의 조정이 필요함</li> </ul>	<p>⇒ <b>통합발주 시에는 하자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 구분이 어려운 하자는 통합발주에서도 발생하나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책임을 전가</li> </ul> <p>※ 고속국도 제65호 터널공사(2013년) : 산재사고 은폐 및 민원처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도급업체인 J건설은 폐업('13.6.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직별 공사업계에서는 개별법에서 일부 하자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범위로 명시하며, 그 외 모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담</li> </ul>
<p><b>3. 상호 연계성 저하로 시설물의 안전이나 품질이 저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인 인력, 자재, 장비, 자금, 시공, 품질 등을 발주기관이나 현장 협의체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li> <li>- 분리발주 도입 목적으로 주장하는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일부 전문건설업체의 이익 확대를 쟁기겠다는 것임</li> </ul>	<p>⇒ <b>통합발주의 하자신청 건수는 폭증, 산재율은 전문직별 공사업계가 더 낮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건설사들의 총괄하고 있는 민간 공동주택의 하자신청은 대폭 증가(2011년 327건, 2015년 4,244건)</li> <li>- 하자심사 신청이 발생하는 공중도 건축 82%, 기계 10%, 전기 5%, 토목·조경 3%</li> <li>-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품질 저하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li> </ul> <p>※ 반면 서울연구원(2013) 연구결과에서는 시공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설계품질과 성실시공이라는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건설업 부상사고 0.12~0.15% 사망사고는 0.03% 수준</li> <li>-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업계 부상사고는 0.04%, 사망사고는 0.01%</li> </ul>

분리발주 반대 주장(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찬성(전문직별·전문건설업계)
<p><b>4. 추가적인 입찰 및 계약, 현장관리 등으로 행정비·업무 증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건설업체가 현장을 총괄하는 종합 계획/조정/관리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원도금액의 15~27%에 해당</li> </ul>	<p>⇒ <b>불필요한 원도급사의 중간마진 제거로 총공사비 절감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국가예산의 절감 등이 발주방식 선정의 주요 요인</li> <li>- 경인아라뱃길 공구별 총도금액 대비 하도급비율은 총도금액의 58.09% 수준</li> <li>- CM을 활용한 분리발주 시 소요비용은 총공사비의 약 2.98%이지만 건설업 평균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합계는 6.26~ 10.01% (2011년~2015년 기준)</li> </ul>
<p><b>5. 분리발주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는 불가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며, 해외에 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를 운영</li> </ul>	<p>⇒ <b>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수직적, 계층적 생산체계가 근본 원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급-하도급의 수직적 관계에서 원도급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불공정행위는 입찰, 계약이행, 대금지급, 준공단계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li> <li>- 또한 현행 규제대책은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제기(2012년 이후 7조 5천억원의 과징금 중 56.5%가 감액)</li> <li>※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의 모호한 기준이 적용(감사원에서 공정위 담당자 징계 요구)</li> <li>- 통합발주의 수직적인 생산체계 하에서는 각종 규제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li> </ul>
<p><b>6. 전문업종간 업역 분쟁 초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방수도료 시공과 도장공사업 등과 같이 업종구분이 모호해 분쟁 소지가 큼</li> </ul>	<p>⇒ <b>업역 구분은 업종간 논의사항이며, 지속적인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마찰 경감은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역 분쟁은 통합발주로 인해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에도 발생 중이며,</li> <li>-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업계에서도 일부 유사 공종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주장</li> <li>- 또한 업종구분이 더욱 세분화된 전문건설업계에서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및 확대 적용을 요구 중</li> </ul>



분리발주 반대 주장(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찬성(전문직별·전문건설업계)
<p><b>7. 종합건설업체의 사업관리능력 저하로 해외 진출 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공종을 인위적으로 분리발주할 경우 첨단 복합시설에 대한 시공 역량이 저하됨</li> <li>- 현행법 체계상 종합건설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그 역할을 CM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li> </ul>	<p>⇒ <b>종합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국내 공공공사를 통합발주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논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건설시장에서 매출액 상위인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분리발주를 적용</li> <li>※ 2014년 기준 미국 3위(점유율 13%), 독일 5위(8.6%), 일본 7위(5.3%)</li> <li>-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의 기술능력이 시공관리 등에만 제한되어 있음에도 CM 위탁에 비해 과도한 사업비 낭비를 초래</li> <li>※ 제2롯데월드의 경우, 토목설계는 영국 Arup, 건축설계는 미국 KPF, 구조설계는 미국 LERA, 구조 검증은 미국 TT, 강풍검증은 캐나다 RWDI, 건물 외벽 커튼월은 일본 리탈, 컨설팅은 미국 CDC사가 담당(주요 설계는 해외업체가 모두 수행)</li> <li>※ 2013년 기준 세계 30위 설계회사 중 한국기업은 전무(단, 매출액 기준으로는 현대건설 13위, 삼성엔지니어링 15위, GS건설 29위)</li> </ul>
<p><b>8. 분리발주 확대 시 종합/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 구분이 불필요하므로 폐지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발주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형태로 수주할 수 있다면 하도급을 전제로 한 현행 영업 범위 제한은 불필요함</li> <li>- 종합건설업체도 대부분(97% 이상) 중소기업으로써 대기업=종합건설업체, 중소기업=전문건설업체의 주장은 불합리</li> </ul>	<p>⇒ <b>종합/전문건설업 영업범위 폐지는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영업범위를 허용하라는 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발주 법제화 이후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필요</li>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 확장 자제, 진입 자제 등을 권고</li> <li>- 종합건설업 1업체당 매출액 약 210억원 전문건설업 1업체당 매출액 약 21억원으로 종합건설업의 1/10 수준</li> <li>- 분리발주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로써 분리발주제도 확대 적용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역 침해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됨</li> </ul>
<p><b>9. 기술력 축적 지원이 아닌 물량지원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저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공사비를 못 얻는 이유는 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계약 체결이 근본적인 원인</li> <li>- 총수주액과 수익성이 전문업계는 증가세인 반면, 종합업계는 감소세</li> </ul>	<p>⇒ <b>정부는 중소기업 구매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이미 시행 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li> </ul>

분리발주 반대 주장(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찬성(전문직별·전문건설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장비수요예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요를 확대</li> <li>- 통합발주(턴키/대안입찰 등)의 낙찰률은 94.7%, 평균 입찰자 수는 3.18개사</li> <li>- 종합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대형건설사들의 해외건설수주액 급감,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존 사업의 손실 증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에 기인함</li> </ul>
<p><b>10. 발주처와 업체간 유착 비리 양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를 소액분할 후 수익계약하거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등을 추진할 경우 개연성이 충분함</li> </ul>	<p>⇒ <b>분리발주로 인한 입찰비리 발생은 무리한 추정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면, 현재 통합발주되고 있는 공공공사에서 대기업 건설업체들의 로비, 입찰담합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li> <li>- 종합건설업계 주장과 달리 행자부에서는 중소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li> <li>- 각 지자체에서도 턴키입찰(통합발주) 방식을 중단하거나 지양하는 정책을 추진 중</li> </ul>

### III . 현행 통합발주제도의 문제점

상기의 분리발주제도 반대논리와 같이 종합건설업계에서는 분리발주 제도로 인해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추정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반면, 대표적인 통합발주방식인 턴키·대안입찰제도에서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의한 입찰담합,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등으로 인한 독과점 시장의 형성, 각종 하도급 폐해 등 각종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각종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통합발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문제점	
통합발주의 문제점	1. 대기업 입찰 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업종 중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는 건설업이 1위(최근 3년간 과징금 1조원)</li> <li>· 2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입찰차액 1억원 미만 86%, 설계가 대비 0.1% 미만 72%</li> <li>· 담합은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심각한 경쟁 제한적 행위</li> <li>·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예방차원의 대책이 시급</li> </ul>
	2. 대기업 독과점 시장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1차 턴키공사 16곳 중 15곳이 상위 10위 업체, 금액으로는 94%</li> <li>· 턴키공사(통합발주)는 국가자원 배분체계를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li> <li>· 턴키공사의 중소기업 낙찰비율은 22.9%('06년~'10년 기준)</li> </ul>
	3. 평가위원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건설사들의 로비활동으로 인한 각종 비리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li> <li>· 제도적 장치, 자정노력으로는 만성적인 로비활동의 근절이 불가능</li> </ul>
	4. 건설하도급 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청-하청형태인 통합발주의 수직적·계층적 생산체계는 각종 하도급폐해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li> </ul>
운영상의 문제점	5. 국토부의 편향적 정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 담합행위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야 할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담합 건설사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공문발송</li> <li>· 각종 비리로 논란이 된 턴키방식발주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li> <li>· 친 대기업 성향의 편향적인 정책은 턴키발주의 비리를 조장하는 배경</li> </ul>
	6. 부당행위 제재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담합 등으로 제재 받은 대기업은 로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경감 받거나 사면 등의 특혜가 집중</li> </ul>

구분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6. 부당행위 제재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이후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7조 5천억원 중 56.5%가 감액(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여건 등의 모호한 기준을 적용)</li> <li>·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72.7% 대기업</li> </ul>
	7. 통합발주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도급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li> <li>· 특허공법, 특수한 기술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에 따라 통합 발주되는 사례 급증</li> <li>· 기재부,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서도 상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li> </ul>

□ 발주제도 개선 관련 연구

- [감사원(2014)]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턴키입찰의 문제점 제기
  - 중소 건설업체 입찰참여 제한, 높은 낙찰률로 인한 예산낭비, 설계 심의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심의위원 선정과정의 부적절성 등
- [기재부(2013)] 대형건설업체의 독과점적 지위, 입찰담합, 과잉설계, 설계평가위원들의 로비 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을 검토
  - 턴키공사 등의 낙찰률 및 대기업 낙찰비중 분석, 부적절한 통합발주 적용, 독과점 시장, 담합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서울시(2013)] 서울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 자료를 분석하여 턴키 입찰방식의 성과를 평가
  - 일괄입찰공사의 높은 투찰률은 대형건설사들의 독과점적 진입장벽을 입증하는 근거이며, 제도개선 방안으로 분리입찰의 활성화, 일괄입찰 공사 제도운영의 개선 등을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2010)] 통합발주제도에 대한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 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을 모색
  - 통합발주의 고낙찰률, 과점적 시장현황 등을 분석, 운영과정의 문제점 제기 및 분할발주, 공동도급 등을 제안

## IV. 시사점

분리발주제도는 전문건설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971년 제정된 정보통신공사사업계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전문직별 공사업계 외에 전문건설업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분리발주제도의 확대 또는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건설산업 선진국에서도 수직적·계층적 생산 체계로 인한 하도급 폐해방지, 중소기업의 육성, 분리발주의 경제성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에서는 분리발주제도를 반대하며 각종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제도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은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상생발전, 중소기업의 육성,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향상 등을 위해서는 공공공사의 분리발주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일부 턴키공사 등이 통합발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VI. 참고 문헌

- [1] 국민권익위원회(2010),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제도개선」, 2010, pp. 23.
- [2] 국토교통부(2015), 「국토부, 2년간 하도급 대금 740억 체불, 2600여개 줄 줄이 도산」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5.9.10.
- [3] 국토연구원(2015),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 및 거래방안 연구」, 2015.
- [4] 기획재정부·KDI(2012), 「턴키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10.
- [5] 김성연(2014),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에 관한 감사원 감사사례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4, pp.114.
- [6] 김진·박상원(2015),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조세연구원, 2005.
- [7]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3),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2013.5.
- [8] 대한건설협회, 2015년 건설업 경영분석
- [9] 서울시(2012),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 2012.11.26.
- [10] 서울특별시(2013), 「서울시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용역」, 서울특별시, 2013.10.
- [11] 심규범(2006),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 [12]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원인조사(공사종류별 사고부상, 사망사고)
- [13] 을지로위원회(2014),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 2014.
- [14] 이복남·장철기(2005), 「입찰 참가자 수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 건설산업연구원, 2005.
- [15] 전인우(2014), 「한국의 공공구매계약에서의 분리·분할발주 효과분석」, 한국중소기업연구원, 2014.

-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17.1.
- [18] 한국생산성본부(201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실증연구」, 2012.5.
- [19] 한국수출입은행(2015),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2015.5.

##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변동추이

원가관리실 연구원 김정우

kjw@kici.re.kr

### I. 정보통신공사비지수 개요

- 정보통신 공사비지수(2010=100)는 과거 수행한 시설공사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물가변동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중노임단가, 생산자물가지수 등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임
- 해당 지수는 공사의 형태에 따라 총 11개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표준시장단가(구 실적단가)에 최근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시설공사비 변동추이 파악에 활용됨
- 공사비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므로 1개월 늦게 산정·발표되며, 본 동향에서는 '17년도 4월~7월 지수 동향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 ※ 2017년 8월 → 2017년 7월 지수(잠정치) 발표

### II.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 □ '17년도 4월 ~ 7월 공사비지수 추이

- '17년도 4월 종합지수는 119.81로 전월대비 0.14% 하락하였으며, 7월은 119.18(잠정치)을 기록하며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영향으로 공사비지수 분류체계의 대부분 분야에서 지수의 하락이 나타남
- 4월~7월은 노임 변동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의 영향을 받지 않아 노무비 변동은 반영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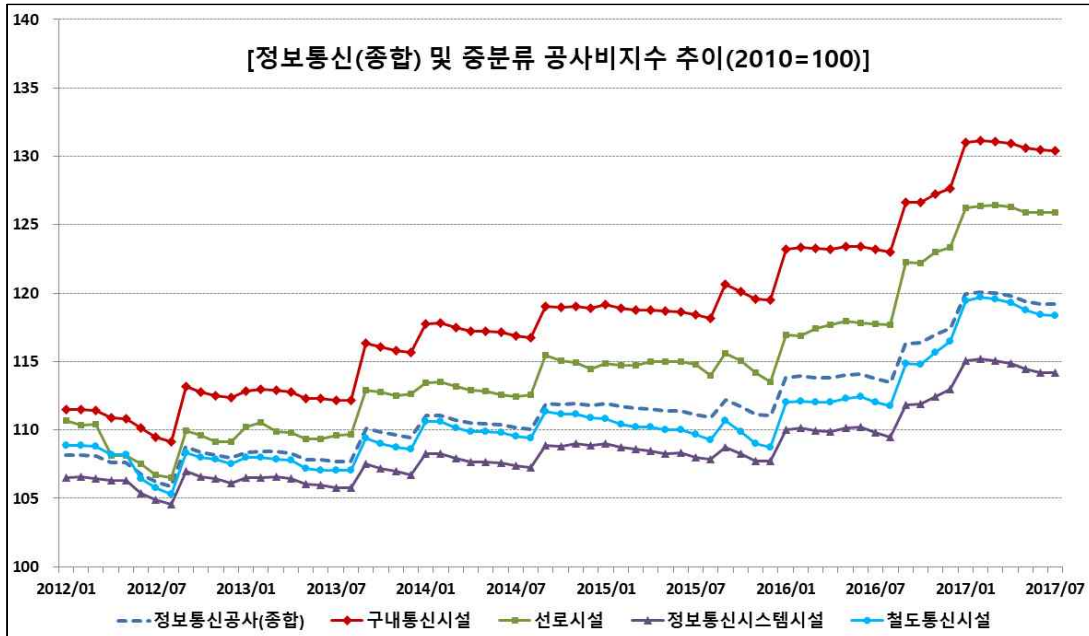
[표 1] '17년 4월 ~ 5월 지수 및 전월 대비 변동률

분류 체계	4월		5월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정보통신 공사비지수(종합)	119.81	-0.14%	119.43	-0.32%
구내통신시설	130.93	-0.11%	130.61	-0.24%
공동주택설비	136.64	-0.07%	136.40	-0.18%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126.38	-0.14%	125.99	-0.31%
선로시설	126.30	-0.08%	125.91	-0.31%
선로설비	126.30	-0.08%	125.91	-0.31%
정보통신시스템시설	114.86	-0.17%	114.48	-0.33%
정보제어설비	113.41	-0.18%	113.00	-0.36%
정보통신특수설비 (교환, 전송, 항공, 선박 등)	117.35	-0.14%	117.01	-0.29%
철도통신시설	119.31	-0.20%	118.75	-0.47%
철도통신설비	119.31	-0.20%	118.75	-0.47%

[표 1] '17년 6월 ~ 7월 지수 및 전월 대비 변동률

분류 체계	6월		7월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정보통신 공사비지수(종합)	119.20	-0.19%	119.18	-0.02%
구내통신시설	130.46	-0.11%	130.41	-0.04%
공동주택설비	136.33	-0.05%	136.29	-0.03%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125.77	-0.17%	125.72	-0.04%
선로시설	125.92	0.01%	125.92	0.00%
선로설비	125.92	0.01%	125.92	0.00%
정보통신시스템시설	114.20	-0.24%	114.19	-0.01%
정보제어설비	112.67	-0.29%	112.65	-0.02%
정보통신특수설비 (교환, 전송, 항공, 선박 등)	116.82	-0.16%	116.83	0.01%
철도통신시설	118.43	-0.27%	118.35	-0.07%
철도통신설비	118.43	-0.27%	118.35	-0.07%

※ '17년 7월 공사비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17년 8월 지수 공표시 확정됨



[그림 1]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15년 1월 ~ '17년 7월)

### Ⅲ. 시사점

#### □ 공사비지수 변동 요인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사비지수에 매월 영향을 미치게 되며, 최근 생산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공사비지수의 하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17년 4월~7월 종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 품목 중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 분야의 지수가 하락하였음

※ 본 자료의 전문은 우리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에 게시되어 있음.



◆ 임주환원장, ‘사이버보안지수 하락이 주는 교훈’ 정보통신 신문에 기고

- 임주환원장은 2017. 7. 14.일 정보통신신문에 ‘사이버보안지수 하락이 주는 교훈’이라는 기고에서 우리나라는 사이버보안지수에서 2015년 공동 5위에서 13위로 추락했으며, 해킹 당하기 쉬운 나라로는 105위를 차지하여 네팔(Nepal)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EMP 공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오피니언  
기고

**사이버보안지수 하락이 주는 교훈**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임주환

박남수 기자 | wpcpark@koit.co.kr

---

송인 2017.07.14 09:52:09



---

지난 7월 6일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가별 사이버보안지수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 공동 5위에서 13위로 추락했다. 초고속인터넷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TU는 국가별 전산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제사이버보안지수'(GCI: Global Cybersecurity Index) 조사를 시작해 2015년에 첫 보고서를 냈다.

ITU는 보안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 법률, 기술, 관리조직, 능력배양, 협력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한다. 법률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과 침해에 관계된 법적 조직과 체계, 기술분야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조직, 관리조직분야에서는 국가적 레벨에서의 정책 조정조직과 전략, 능력배양분야는 연구개발(R&D)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협력 분야는 파트너십 구축과 협조 체계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하 생략)

출처 : 정보통신신문(2017. 07. 14.)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38>



◆ 임주환원장, ‘국가 R&D 연구 노쇠화문제 풀어야’ 디지털타임즈에 기고

- 임주환원장은 2017.8.17.일 디지털타임즈 신문에 ‘국가 R&D 연구 노쇠화문제 풀어야’라는 기고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R&D에서 나오기 때문에 R&D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과제의 사업화 실패요인으로 연구인력의 심각한 노쇠화와 과제수가 많은 것을 지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 확보와 엄격한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였다.

**[시론] 국가 R&D 연구 노쇠화문제 풀어야**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입력: 2017-08-17 18:00  
[2017년 08월 18일자 19면 기사]

폰트 + - [icon] [icon] [icon]

**[단독] 시야방해 없는 CD홀 원터치 스마트폰 거치대**



임주환 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 원장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R&D 체제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분야 R&D에 대한 정책 결정은 물론 예산 배분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는 정부가 연간 19조원 정도이고, 민간은 정부투자 규모의 3배 정도다. 국가의 경쟁력이 R&D에서 나오기 때문에 R&D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바가 컸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한발 앞서 나아가야 하는 현재 과학기술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정부R&D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일 심각한 것은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부족하며 과제는 성공인데 사업화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구기관이 2015년 지출한 R&D 예산이 4조50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수입은 투입예산의 3%도 되지 않는 1334억 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연구개발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디지털타임즈(2017. 08. 1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1802101951607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1802101951607001)

◆ 2017년도 제1차 표준시방서·공법 전문가자문위원회 개최

-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공법 개발연구를 위한 2017년도 제1차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공법 전문가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용 전원 및 접지설비에 대한 연구결과 검토 및 보완사항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2017년도 제2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선TF 회의 개최

-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개선 및 발전방안 검토를 위한 제2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선 TF(A, B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17년 남북한 ICT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 지난 7월 28일 연구원은 북한 정보통신공사 용어 연구와 관련하여 남북한 ICT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17년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자문단 회의 개최

- 지난 8월 10일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해외진출의 세부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중장기 ICT 융합기술 정책방향 전문가 회의 개최

- 지난 8월 23일 연구원은 더케이호텔(양재동)에서 중장기 ICT 융합기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및 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보통신산업동향』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로, 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산업동향

제19권 (2017.09)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발행인** 문창수

**편집인** 임주환

**발행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12번길 80

TEL (031)231-3400 FAX : (031)269-5210

<http://www.kici.re.kr>